

관세폭탄에 금타 화재·위니아 전자 파산...광주경제 벼랑끝

금호타이어 가동 중단 장기화... 급여 불확실 근로자 불안
미국 23일부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도 50% 철강관세 부과
위니아 계열사 줄줄이 법정관리...정부·지자체 특단대책 필요

광주지역 제조업계를 지탱해 온 주요 기업들을 강타한 미국발 관세, 대형 화재, 파산 등 ‘삼중 충격’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을 파생 제품인 냉장고 등 가전제품으로 확대한 데 이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장기 가동 중단 사태, 광주 기반 가전업체인 위니아 계열사의 연쇄 파산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가뜰이나 허약체질인 광주 제조업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마름 급한 지역 경제계에선 정부와 광주시를 상대로 지역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지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조차 수용되지 않는 등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등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50% 관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 가전제품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미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으나, 현지 생산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에 국한돼 있다. 이번 관세는 미국산 철강을 써야 예외인데, 현지 생산 과정에서 미국산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광주 가전사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미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미국 관세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5월 17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존폐 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화재 이후 한 달 가까이 가동이 중단됐고 생산 핵심 시설인 2공장이 사실상 전소되면서 공장 정상화 여부나 이전 논의 등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완전 폐쇄 가능성까지도 걱정하고 있다. 현재 공장 노동자 2500여명은 일터에 복귀하지 못한 채 ‘대기’ 상태로 남아 있고, 이달 말 지급 예정인 급여도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급여일이 매달 27일인 금호타이어는 지난 5월

17일 화재 이후 21일 휴업 공지를 내려 5월 27일에는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됐지만, 업무가 멈춰선 6월에는 근로기준법과 노사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정상 급여의 70%만 지급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광주 광산구는 최근 이 같은 여러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생활 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포한다. 광산구는 최근 위니아전자를 비롯한 계열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상황 등을 포함해 경제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재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광주에 분사를 두고 ‘딥체 신화’를 쓴 위니아 그룹은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위니아가 2023년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광주지역 생산직 노동자 144명이 급여를 제대

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위니아전자가 파산 선고를 받는 등 위니아그룹의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타이어와 가전은 광주 주력 산업을 이끄는 양축이라는 점에서, 이 두 업종이 동시에 흔들릴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광주 기아차 공장마저 미국발 관세 여파로 일부 차량의 미국 수출 물량 축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도 미국 수출길이 막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광주는 자동차와 가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도시로, 미국발 관세 피해 여파에다 대형 화재, 파산 등이 겹치면서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노동자 생계 지원과 산업 회복을 위한 지자체·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해양에너지-광주보훈청, 광복 80주년 맞아 현충시설 정화활동

장성 소재 ‘3·1사’ 제조작업·청소

해양에너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지역 소재 독립운동 현충시설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지원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사진> 해양에너지는 “해양에너지 봉사단이 지난 13일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소재 현충시설인 ‘3·1사’를 방문해 참배하고, 시설 인근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광주지방보훈청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현충시설을 접하고 독립운동 관련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해양에너지 봉사단은 이날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와 함께 3·1사 인근 주변의 제조작업과 내부 청소를 실시했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국보훈의 가치



를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3·1사’는 일제침략에 대한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항거로 평가받는 ‘북이면 모현리 3·1운동(1919년 4월 3일)’의 거사를 주도한

유상설, 고용석 열사를 비롯한 13인의 독립운동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1989년 창건한 사당이다. 3·1사는 장성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 현충시설로, 매년 3월 문중이 주관하는 제사가 봉행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KIA타이거즈 우승 기념

광주은행 적금 가입 이벤트

7월까지 다양한 경품 제공

광주은행은 “오는 7월 31일까지 ‘KIA타이거즈 우승기원적금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이벤트는 KIA타이거즈의 V13 우승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광주은행과 인크커피가 협업해 비대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인 ‘KIA타이거즈우승기원적금’은 월 10만~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정액 적립식 상품으로,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3.85%(기본 연 2.60%)의 금리를 제공하는 광주은행의 스테디셀러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Wa뱅크’ 앱 또는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추첨을 통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스카이박스 1일 이용권(본인 포함 10인)’, ‘인크커피 매뉴 쿠폰 10만원 상당(4명)’, ‘인크커피 아메리카노 1+1 모바일 쿠폰



(1000명), ‘Wa뱅크 혜택라운지 입장권(상품 가입자 전원)’을 제공한다. Wa뱅크 혜택라운지는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 ‘광주 Wa뱅크’에서 운영되는 제휴 서비스로, 뷰티·영화·외식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쿠폰 및 서비스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방문 또는 광주Wa뱅크

앱,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석현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부업체 문턱도 못넘어...지난해 최대 6만여명 불법사금융 이동

연 1200% 이상 초고금리 비율 늘어

지난해 대부업체 문턱마저 못 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이 최대 6만여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2만 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 불법사금융으로 옮겨간 추산 인원(5만

3000명~9만4000명)과 이들의 이용금액(6800억~1조2200억원) 대비 줄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의 작년 대출 승인율이 9.6%로 전년(8.2%)보다 다소 높아졌다”며 “이는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153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71.6%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20~30대)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작년 10.0%로 높아지는 추세다.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 120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율은 약 17%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과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계란·가공식품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

음식료품 구매력 기준 물가 OECD 2위

물가 16% 오를 때 식품 25% 상승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물가의 최근 5년 누적 상승률 역시 25%에 달하며 총지수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정부는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물가’를 잡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5일 OECD의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2023년 기준 147로 OECD 평균(100)보다 47% 높았다. 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은 경제 규모와 환율 등 변수를 구매력 기준으로 보정해 국가 간 물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다. 실제 각국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38개국 중 2번째로 높았다. 1위는 유럽의 대표적인 고물가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163)였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94)이나 일본(126), 영국(89), 독일(107) 등도 한국보다 음식료품 물가가 낮았다. 한국의 의복과 신발 물가지수 역시 137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교육(110) 물가 역

시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여러 품목을 포괄하는 가계 최종 소비(HFC: Household Final Consumption) 물가는 85로 평균 아래였다. 교통, 문화·여가, 외식, 주거 물가 역시 평균보다 낮았다. 전체 물가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먹고 입는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품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3이다. 이는 2020년 물가를 기준점(100)으로 삼아 계산한 것으로, 2020년 이후 누적으로 물가가 16% 올랐다는 의미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분기 119.09를 기록했다. 식품 물가지수는 125.04였다. ‘헤드라인 물가’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식품 물가가 실제로도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계란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정부가 일부 환원했던 유류세 인하 혜택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증시 5종목 중 1개꼴 52주 신고가

새 정부 기대감 당분간 강세

이달들어 상장종목 70% 올라

이재명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국내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달들어 전체 상장 주식 5개 종목 중 1개 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들어 지난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스팩·리츠 제외)은 모두 444개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거래 중인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2559개)의 17%에 달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260개, 코스닥시장에서 184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52주 신고가 비율은 코스피가 29%로 코스닥(11%)을 앞섰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책 수혜 기대가 큰 종목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강조하면서 증시 부양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사와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9일 롯데지주는 장중 3만23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같은 날 대신증권과 부국증권도 각각 2만6600원, 4만6500원까지 올라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4일·5만8700원), LS마린솔루션(12일·3만4600원) 등 신재생에너지주도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영향이다. 아울러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남

북 관계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제이에스티나(10일·3775원), 아나티(13일·1만760원) 등 남북 경험 관련주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밖에 지역화폐 서비스 확대 기대에 코나아이(9일·8만6000원), 카카오페이(13일·6만4600원) 등 관련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7.3% 올랐는데, 대선 전날인 2일부터 12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다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조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4.7% 올랐다. 13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종목의 70%에 해당하는 1777개 종목이 지난달 말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754개 종목이 내렸으며 28개 종목은 보합세였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증시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종별로 보면 정책 수혜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엔터주 등이 다음 상승 랠리의 주자로 꼽힌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 1176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9	11	21	30	35	29
등 위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2,052,166,154				13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9,959,102				89
3	5개 숫자일치	1,258,523				3,533
4	4개 숫자일치	50,000				171,545
5	3개 숫자일치	5,000				2,746,919